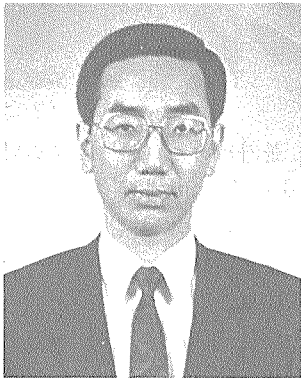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과 정책과제



최 갑 홍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산업화지원반장

1.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배경과 산업적 의의

WTO의 출범으로 이제 세계경제는 국경과 제도를 뛰어 넘는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혁신으로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인류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 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라는 이름아래 2000년까지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건설하여 국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미국경제의 재생과 교육, 의료, 행정 등 공공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

고 있다. 또한 일본은 신사회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Beacon계획 독일의 BERKOM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IT2000, 프랑스의 PATIF 등 세계 각국이 다양한 명칭으로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보혁명의 수단이 되는 정보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94년 5월 범정부 차원의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부에 초고속 정보통신 구축기획단을 설치하고, 해당 부처에 분야별 전담반을 설치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목표는 2015년까지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 기반구조를 확충하여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의 실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향후 최대 성장 유망산업이 될 멀티미디어 정

보산업의 육성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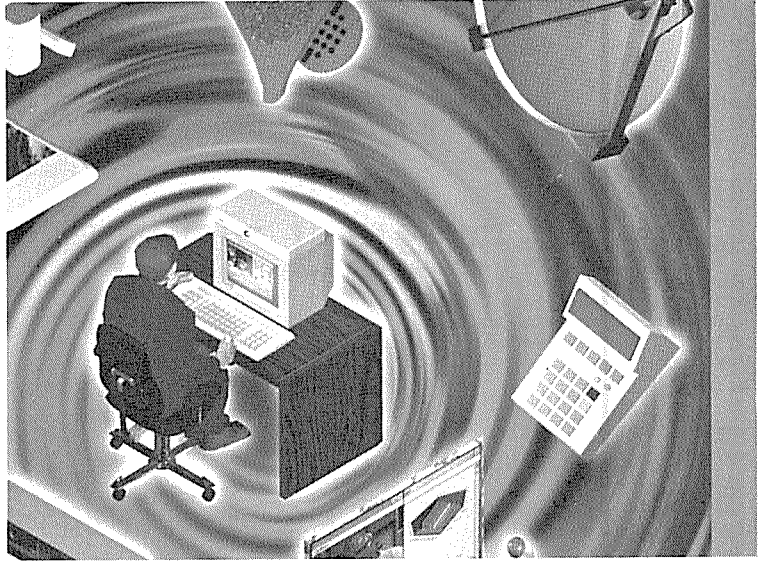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이 우리나라 정보산업에 미치는 산업적 의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첫째,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상징화(Symbolization)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보산업 정책들이 추진되어 오면서 상당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며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이슈가 없었다. '92년말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보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Industry : NSII)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정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면에서나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망(Network)은 물론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사회제도나 관습 등 정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용부처와 공급부처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정보산업 정책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사업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상징화하여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산업 기술은 아직도 아날로그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칼라 TV를 비롯한 단말기기, 방송 및 전송방식 등이 현재까지는 아날로그이며 현재 디지털방식이 개발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로봇, 컴퓨터와 같은 기능의 디지털화가 추진된 후 CDP, 전화와 같은 음성데이터의 디지털화에 이어 HDTV, 비디오텍스와 같은 영상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추진됨으로써 3C(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가 일체화된 멀티미디어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는 데이터, 음성, 영상의 디지털 멀티정보가 될 것으로 이에 접속되는 시스템도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수준도 이에 부응하여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킴으로써 한차원 높은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셋째,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으로써 정보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산업의 범위를 관련기기, 소프트웨어, 관련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기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산업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중에서도 칼라TV, VCR 등과 같은 가정용기와 메모리용 반도체가 성장중심 산업군을 이루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정보매체간의 시스템 통합산업은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하여 단말부문에서는 3C가 일체화된 멀티미디어 기기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초고속망 (Net-

work)을 중심으로 관련기기의 시스템화가 촉진되고 서비스의 다양화와 정보유통의 원활화로 정보매체산업의 활성화가 촉진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보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산업발전의 기반을 재정비 함으로써 정보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두뇌 집약적이며, 산업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성장 전략 자체가 다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반산업여건은 산업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관련제도가 단순화되어 있으며 관련정책도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초고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의 강화, 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하여 정보산업발전의 성장여건이 재정비되고, 관련정책을 다원화·탄력화 함으로써 정보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다는 것이다.

2.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

1) 추진 목표

정부는 20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미국,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계	
	'95	'96	'97	계	('98~2002)	(2003~2015)		
통	교환장비	146	230	480	856	1,360	600	2,816
	전송장비	148	140	384	672	326	1,000	1,998
신	Tbps						670	640
	수십Gbps					150	360	510
	2.5Gbps	16		192	208	176		384
	155-622M	132	140	192	464			464
망	전송로	230	378	-	608	-	-	608
	중계기	106	171		277			277
	광전송로	124	207	43	331			331
	부대장비	27	38	43	108	84	80	272
계	551	786	907	2,224	1,770	1,680	5,694	

이를위해 2010년까지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을 공공재원으로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산업체, 일반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을 통신사업자가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단계별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응용서비스」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법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종합계획은 기술발전과 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정보화 수준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송속도,

구축 범위,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제1단계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 하며, 제2단계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확산단계로 하고, 제3단계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45조 2,000억원으로 이중 1조 8,000억원은 정부가 조달하고 43조 4,000억원은 민간이 조달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신축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요창출 계획

가.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통하여 산업계에 수요를 창출해주는 사업으로는 망

구축사업이 있다.

이중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은 공공 행정기관이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2010년까지 관련설비, 시스템 등 5,700억원 규모의 설비구매를 통하여 직접적인 시장을 창출해 줄 계획이다.

물론 세부계획은 망구축에 대한 상세 설계가 완성될 경우 다소 변경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공공기관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초고속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관련 장비의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계가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설비 및 장비의 국산개발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가 관련설비 및 장비의 국산개발공급을 위해 국산개발시에는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잠정 표준으로 채택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 구축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표3> 선도시험망 구축 설비투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제1단계 ('95~'97)				제2단계 ('98~2002)	제3단계 (2003~2010)	계
	'95	'96	'97	계			
광케이블	13	-	-	13	137	178	444
전송장비	24	23	23	70			
교환장비	-	20	20	40			
부대장비	2	2	2	6			
계	39	45	45	129	137	178	444

계획과 병행하여 2015년까지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관련설비 등 42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줄 계획이다. 물론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에는 통신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구축할 것이므로 향후 통신사업자의 사업구도에 따라 그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신사업자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관련설비 및 장비를 국산개발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에 소요되는 관련설비의 연차별 구매계획과 관련설비의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관

련산업계에 알려 줌으로써 산업계의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 선도시험망 구축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선행하여 서울과 대전간에 선도시험망을 우선 구축하여 관련기관이 응용서비스 및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관련설비에 44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선도시험망은 국가망이나 공중망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선행구축 되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국산장비를 개발하거나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때 시험·평가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선진국 제품을 선도 시험망에 사전 채택 사용하여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관련설비의 국산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라. 시범사업

정부는 초고속관련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

<표2> 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의 단계별 설비투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98~2002)	제3단계 (2003~2015)	계
	'95	'96	'97	계			
○ 광케이블 시설	945	1,065	2,229	4,239	28,519	282,471	315,229
○ 기간전송시설	340	510	588	1,438	4,089	15,598	21,125
○ 교환시설	-	-	-	-	5,381	78,769	84,150
계	1,285	1,575	2,817	5,677	37,089	376,838	420,504

<표4> 초고속 시범사업 투자규모

(단위 : 억원)

		제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	'96	'97	계			
정 부	- 정보화 시범지역	7	100	150	257	-	-	257
	- 원격 시범사업	116	84	78	278	-	-	278
	- 사회간접자본확충	5	10	10	25	-	-	25
	- 신규 시범 사업	10	20	30	60	-	-	60
	-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 건립	112	54	19	185	137	-	322
	소계	250	268	287	805	137	-	942
통 신 사 업 자	- 정보화 시범지역	323	227	200	750	1,000	-	1,750
	- 사회간접자본확충	-	-	-	-	500	-	500
	소계	323	227	200	750	1,500	-	2,250
	계	573	495	487	1,555	1,637	-	3,192

용자의 인식을 제고시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시범사업을 통하여 관련설비, S/W,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련설비 부문에서는 ATM교환기, 가입자 광케이블, 멀티미디어, 단말기, 영상회의 시스템, 복합기능의 단말기 등이 될 것이며, 공공응용서비스는 특히 기술정보, 원격안방 박물관 및 도서관, 전자도로, 과학기술시범 산업망 등이 될 것이고,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는 기업통신, 국제 무역자동화, 종합DB센터, 지능형 빌딩, 원격점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을 건립하여 관련 기기 및 서비스 전시와 관련 시범사업 등을 소개함으로써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 기자재의 수요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가 940억원, 통신사업자가 2,220억원 등 총 3,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에는 원격 시범사업과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 건립, 정보화 시범지역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 공급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가. 공공응용서비스의 개발 지원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나 정보제공 체계를 전산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소프트

<표 5> 공공 응용서비스의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98~2002)	제3단계 (2003~2015)	계
	'95	'96	'97	계			
- 응용서비스 개발	132	165	198	495	1,410	1,600	3,505
- 개발관리	7	8	10	25	70	80	175
계	139	173	208	520	1,480	1,680	3,680

웨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2010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투자하여 시범운영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3년이내에서 순수공일 과제는 소요자금의 100%, 기타는 5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에 과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부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발대상 과제 중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획단이 선정하여 지원하고,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으로써 개발사업자 선정과 개발관리를 추진하며, 개발자에게 초고속 시범망의 수용이나 산업화 지원 등에 우선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 초고속 관련 기술개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이용기술 및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속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체의 기술개발 참여유도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응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산업체가 당장 투자하기 힘든 핵심 기반 기

<표 6> 기술개발 투자규모

(단위 : 억원)

		제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	'96	'97	소계			
정 부	-이용기술 및 핵심기술	241	328	373	942	1,650	1,760	4,352
통신사업자	-핵심기술	1,146	1,300	1,985	4,431	2,500	4,500	11,431
계		1,387	1,628	2,358	5,373	4,150	6,260	15,783

술개발은 국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책과제는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의 선정과 지원·관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내에 있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서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지원규모는 1조 6,163억원으로 정부가 4,372억원, 통신사업자가 1조 1,431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국책과제는 개발소요비의 100%, 산업체 관련과제는 5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 초고속 표준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선도하고 관련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 관련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표준화는 자체 표준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과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표준활동 강화를 위해 표준기술 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초기년도에는 정책과제 중심으로 표준기술기획 과제와 표준연구를 추진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

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총 380억원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에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초고속 관련 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기관에서는 표준연구 및 표준기술 포럼 활동에 참여하거나 표준 세미나 및 관련정보 수집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건정비

초고속 관련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촉진 기능의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식제고와 관련제도의 개선과 국제협력·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정보산업의 성장 여건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도 등을 제정비하고, 정보화 진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지적재산권의 보호, 컴퓨터 범죄의 예방,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정보공개 촉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여건정비 사업은 초고

속 정보통신 기획단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개선 대상과제를 조사, 용역사업으로 발굴하고 각 부처별로 법·제도 정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의견 반영을 위해 초고속사업 참여상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 정책과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관련기관 및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만 구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반구축에 사용되는 관련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집단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구축관련자, 초고속 정보통신 망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집단들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한정된 통신자원의 효과적 활용, 요금규제, 통신사업의 구조, 보편적 서비스제공과 같은 규제적인 정책

이 필요하는 한편,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기업의 사업화 지원, 이용의 활성화와 같은 조장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에서 제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둘째,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관련산업, 특히 정보통신산업을 성장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제이다.

초고속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궁정적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는 멀티미디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성장 유망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WTO와 같은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셋째,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지식 집약적이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육성 정책보다는 동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입지, 정보, 인력, 사회제도, 연구 및 이용환경 등 성장 기반과 산업분류 체계, 통계의 정비, 민관의 협력채널 등 주변여건의 정비 등이 중요하다.

현재 종합계획안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들을 정비해 주느냐가 주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끝으로, 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지향해 왔던 대로 동계획도 목표 지향적이며 정책의 수립자인 정부의 실천 계획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와 수요 지향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동계획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들이 수요자의 입장과 요구(NEED)가 무엇인가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실천계획과 추진내용은 주변여건의 변화와 기술발

전 추이에 따라 탄력화시킴으로써 추진과정에서의 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발상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정책추진이 아닌가 한다. 특히 동사업과 같이 20년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예를 들면 “2015년까지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보다는 “2015년까지의 일반수요자가 원하는 초고속 멀티미디어정보를 제공하겠다”로 설정하고, 이의 추진이 광케이블, 이동망, 위성망, CATV망 등이 될지는 추진과정에서의 기술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축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정부만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간의 책임과 자율로 동 사업이나 정부정책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용어해설

클립보드 (Clipboard)

도스 상의 버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장소, 윈도우상에서 자르거나 복사를 실행하면 일단 정해진 내용이 클립보드

상으로 옮겨지며 동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붙이기를 실행하는 작업을 통해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